

# 학과평가의 발전적 지향을 위한 과제

강 경 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관리부장



## 1. 서 론

그 래 몇 십 년만의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는 기상 이변의 서막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함)에서 주관하는 94년도 학과평가의 현지방문평가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금년도의 학과평가는 이른바 '학과평가인정제'로 바뀐 이래 세번째 시행된 것으로서, 전국 대학의 생물학계열 학과(56개교 65개 학과)와 화학공학계열 학과(34개교 36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21명과 12명의 해당 학과평가위원들에 의해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95년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91년말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학과평가인정제가 출범한 이래, 대학사회에는 '발전과 충실의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는 종전의 대학사회가 지향하고 있던 '성장과 확대의 바람'을 탈피하여, 대학개혁의 새로운 변화 모습을 보여 주는 것<sup>1)</sup>으로서, 대학평가가 근간의 대학 환경 변화 - 대학정책의 자율화 시행, 교육 부문 시장 개방의 도래, 대학 진학인구의 감소 예상 등 - 에 대비한 대응 기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 2000년까지 7년을 주기로 하여 시행되는 '종합평가인정제'는 학과평가로부터

1) 이상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평가인정제의 정착 과제", 『고등교육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고등교육연구회, 1993, p. 15.

불붙기 시작한 대학교육의 개혁을 가일층 가속화하고 있어, 대학평가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정책의 시행에는 완전무결한 순기능만 있지 않은 것처럼, 대학평가인정제의 시행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학평가의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되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평가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오랜 기간의 경험 축적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제도는 그 나라와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환경, 대학교육의 목표와 특성,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화·개방화·다양화로 특징지어지는 오늘의 세계 환경 변화추세는 결국 국가간에 있어서도 품질 경쟁을 통한 무한경쟁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대학교육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양적 측면의 모든 부문에 걸쳐 한국 대학교육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부문은 '대학생 인구수'와 '대학입시 욕구'뿐이다. 대학교육의 시설과 연구 환경의 열악함은 대학재정의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그 돌파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학 경영의 새로운 타개 방안도 손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시행되어온 학과평가제도는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초기의 정착화 단계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쳤음은 확고한 사실이나, 지난 3년간의 실시과정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로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화자찬만은 아닐 것이다.

근간에 이르러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시행과 함

께, 대학사회 일부에서는 "이제 학과평가는 사라지고, 종합평가만 실시하게 된다"는 뜬소문이 일고 있으며, 학과평가의 결과 발표에 대해 극소수 대학의 불만이 제기되었던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평가는 학과평가와 종합평가의 두 축을 변함 없이 유지하면서,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학과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의 효과 구현, 평가기준 설정, 평가의 절차 정립, 평가결과와 공표와 활용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학과평가를 포함한 대학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는 대체로 이 제도의 실제적 측면보다는 예상 가능한 문제 제기나 이론적 측면에 치중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서는 동 제도의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 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먼저 학과평가제도의 개요를 요약하고자 한다.

## 2. 대학평가제도의 변천과 학과평가인정제의 개요

### 1) 대학평가제도의 변천

해방 이후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쳐 오늘에 이른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평가제도와 관련시켜 구분해보면, 정부 주도기(1945~1971), 정부와 대학 협동기(1972~1981), 대학자율평가기(1982~1991), 대학평가인정제시기(1992~ )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sup>

2) 나민주, "대학평가인정제도의 현황과 정착과제", 미발표 논문, 1994, pp. 2~4.

먼저 정부 주도의 평가는 대학의 설립이나 시설 확보에 관한 인·허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문교부의 행정 관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때의 평가는 이른바 ‘감사’의 성격과 동일시된 것으로서, 평가 대상 대학들은 수동적·소극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와 대학 협동기의 평가는 당시 ‘실험대학제도’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는데, 평가의 주된 내용은 실험대학의 자격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가를 담고 있었으며, 관·학협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학자율평가는 1982년 대교협의 발족과 함께 대학교수 주도로 장학적 의미의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서 평가활동 전반에서 대학사회의 자율성이 확립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에 대학기관평가(11회)와 학문영역평가(23회), 대학원평가(6회)가 실시되었다.

대학평가인정제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이래, 대교협 주관으로 정책방안 연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1991년 10월에 교육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학과평가는 1992년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 1993년 화학학과 기계공학과, 1994년 생물학계열 학과(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와 화학공학계열 학과(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종합평가는 1994년부터 국립 6개교와 사립 1개교<sup>3)</sup>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제가 종전의 평가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대학의 특성을 살린 대학 운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 발표한다는 점과 그 결과에 따라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또한 정부, 기업

체, 재단 등으로부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대학의 질에 관한 종전의 평가는 단지 입학생의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 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큰 대학은 좋은 대학’이라는 막연한 세평에 의해 일반 사회의 인식이 이끌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 2) 학과평가인정제의 개요

이 제도의 기본 구조를 보면, 대교협에 병설되어 있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로부터 대상 학과를 선정하고(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대학평가인정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3. 4. 1 발족되었으며, 그전에는 대학교육심의회에서 평가대상 학과를 선정하였음), 대교협은 관련 학회의 협조를 받아 평가인정기준을 개발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개별 대학 학과에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개별 대학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가 대교협에 접수되면 이에 대해 학과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인정 업무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과평가인정제의 주기는 동일 학과에 대해 10년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 시행 초기의 평가 대상 학과 선정 기준은 첫째로 21세기를 지향하여 국가의 산업 발전을 주도해야 할 학과, 둘째로 이학계와 공학계 학과 중 1개 학과씩 2개 학과, 셋째로 설치 대학수가 10개교 이상인 학과, 넷째로 대학원이 개설되고 졸업생이 배출된 학과 등이다.

그러나 95년부터 학과평가는 과거의 평가와는 달리 단일 학과의 평가체제에서 벗어나 학문계열별 평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예컨대 경영학계열 학과를 평가한다고 할 때

3)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포항공대의 대학별 자체평가연구가 94. 4.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대학의 현지방문평가는 94년 11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4) 95년도의 평가대상학과는 94년 8월말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각 대학에 통보될 것이다.

경영학과는 물론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호텔경영학과 등 유사학과를 모두 평가 대학 학과로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대학별 평가보고서도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94년도에는 중심학과(생물학과, 화학공학과) 이외의 유사학과 평가는 대학의 평가 희망의사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95년부터는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과 통합을 유도·권장하기 위하여 유사학과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세분화된 학과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에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sup>5)</sup>

### 3. 학과평가인정제의 기대효과에 관한 문제

지난 3년간 평가 대상 학과는 물론 거교적 차원에서 평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평가를 받은 모든 학과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자와 우수 교수 충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반한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재정투자 측면을 살펴보면 모든 평가 대상 학과의 투자액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큰 규모의 사립대학의 경우 학과당 대체로 2~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예컨대 생물학과 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투자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은 그 액수가 몇 천만 원대에 그치고 있어 투자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평가 대상 학과의 평가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하여 학내의 타학과에 대한 재정 투자는 묶어둔 채, 해당 학과에 대해서만 집중 투자하는 '벼락치기 평가'도 간혹 지적되고 있다. 평가를 받는 학과

의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 학과 평가의 주기는 10년이라고 공표되었지만 - 호기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학 본부에 한꺼번에 엄청난 시설·설비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대학 본부는 타대학에 뒤질 수 없다는 경쟁 심리로 인하여 '올며 겨자먹기'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또 평가가 끝난 후에는 일부 시설·설비를 타학과로 복귀시킨다거나 연구실이나 공간의 간판을 원래의 위치로 재배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도 가끔씩 들려 오고 있다.

다음으로 해당 학과의 교수를 신규 충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1~4명씩의 교수를 충원하여 평가 대상 학과 전체로는 80~100여 명의 교수가 신규 채용되었으나, 이 역시 타학과의 교수 충원은 묶어둔 채, 평가 대상 학과를 우선하였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학과평가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시설·설비의 확충과 교수 충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대학 재정이 취약한 현실적 여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국가 산업발전의 주도적 학과인 이·공학계 학과에 두었다고 본다면 지나친 전강부회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시설·설비의 원대복귀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학의 도덕성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가 종료된 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가와, 만약 이를 발견할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이에 대해 평가 주관 기관인 대교협은 입장만 해당 대학에 경고함은 물론, 평가위원회나 대교협 연구진의 현지 점검을 거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의 처리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혀

5) 세분화된 학과 운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육부는 94. 7. 27일자로 "학과 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듣다.

그리고 학과평가의 기대 효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점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운영의 충실화는 대학교육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4년의 학과평가에서 처음 시도된 유사학과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바 일부 대학의 학과 운영이 과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대학의 학생 정원을 늘려 받기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전공 교수 구성 등을 은폐한 채 유사한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유사학과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또 시설과 설비의 중복 투자까지 겹치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평가기준의 타당성 문제

학과평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평가기준의 타당성 보장이다. 우리의 대학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정부적(non-governmental) 형태로 운영되며, 대학사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은 그리 문제되고 있지 않다. 현재의 학과평가 기준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의 6개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대항목은 다시 20여 개의 소항목으로, 이들 소항목은 50~60개의 평가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마다 가중치를 달리하여 학부와 대학원 모두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의 비중은 약 4:6정도이다. 정량적 평가항목은 A, B, C, D, E의 5단계, 정성적 평가항목은 A, B, C의 3단계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의 틀 속에서 해당 학과의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는 전문 교수들과 대교협 연구진에 의해 작성·시행되고 있다. 해당 학과평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평가기준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일부 평가항목의 변별도가 낮다거나, 정성적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자간의 객관도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의 변별도 문제는 현재의 학과평가 기준이 국제적 선진 수준을 겨냥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 즉, 지금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 수준을 최소 수준(minimum requirement의 충족)으로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학과평가의 제2주기가 시작되는 2001년 이후의 평가기준은 당연히 국제수준을 지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성적 평가항목에 있어서 평가자간의 객관도 유지 문제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전후의 워크숍과 사후회의는 물론 평가기간중에도 수차에 걸친 상호 연락을 취함으로써

- 6) 객관주의는 전통적으로 F. 베이컨의 경험주의와 함께 "모든 지식은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닌 관찰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주관주의는 예컨대 E. W. 아이스너에 따르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지식의 객관화는 경험에서 얻어진 것 이외의 느낌을 고갈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다. 즉, "인간이 느끼는 것을 알기 위하여, 행동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행동 저편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점들은 오늘날까지도 각기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다.

씩, 평가위원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본래 평가란 '어떤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가치판단'이지, 이론의 탐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 말은 평가가 평가자의 임의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평가의 객관도와 신뢰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모든 평가항목을 정량화해야 한다는 극단론적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황금분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5. 평가의 절차 정립 문제

학과평가의 시작 단계인 평가 대상 학과의 선정에서부터 각 학과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실시를 거쳐 평가결과의 공표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이제 확고히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4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수는 무려 550여 개가 넘고 있어, 10년을 한 주기로 정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이들 학과 모두를 평가한다면 매년 50여 개 이상씩을 평가해야 한다. 10개 이상 개설된 학과만을 평가한다고 해도 매년 10여 개 정도가 해당된다. 이는 국고에 의존하는 현재의 예산 사정과 대교협의 인

력으로는 극히 힘든 일이다. 따라서 앞서 밝힌 대로 95년부터는 계열별 평가로 전환하게 되며, 평가 대상 학과선정도 최소한 2년 단위로 미리 공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평가 예산의 일부는 평가 대상 대학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한 학과의 평가를 위하여 20여 명의 평가위원들이 2주 정도의 현지방문평가에 투입되고 있어, 이러한 인적·물적 규모에 걸맞은 적절한 예산 확보 문제는 현재 대교협이 안고 있는 크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평가위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워크숍 시간을 현행 1박 2일에서 최소한 2박 3일로 늘리고, 평가 대상 학과장 회의를 1박 2일 정도로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6. 평가결과의 공표와 활용 문제

학과평가인정제의 결과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표 1>과 같이 발표되었다.

우수 학과(첫 해인 92년에는 상위권 학과로 부름)의 선정 기준은 학과평가위원회 및 평가인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부의 경우 총점의 90% 이상을 취득한 대학을 선정하되, 이 숫자는 매년 전체 평가 대상 대학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학과평가제도가 평가철학의 기본 원리로서 목표지향평가(흔히 절대평가로 부름)와 상대평가를

<표 1> 학과평가인정제 실시 현황 및 우수 학과 현황.

연도	실시학과	실시대학수	인정대학수	참고
1992	물리학과	53	학부 20, 대학원 10	상위권 학과
	전자공학과	45	학부 17, 대학원 10	
1993	화학과	64	학부 23, 대학원 15	우수 학과
	기계공학과	33	학부 13, 대학원 10	
1994	생물학계열 학과	65	(95년 2월 발표)	
	화학공학계열 학과	36		

조화롭게 적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혹자는 전체의 40% 수준을 우수 학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앞서 말한 대로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의 상대적 순위에서 상위 40%, 중위 30%, 하위 30%로 구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평가의 제2주기에서는 우수 학과수를 다소 줄여 나갈 예정이다.

대학원은 총점 순으로 10개교를 선정하였으나, 93년도 화학과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학과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여 15개교로 늘려 발표하였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별로 각 대학이 얻은 총점과 순위를 그 대학의 총장만이 알 수 있도록(타대학의 점수와 순위는 밝히지 않았음) '인비'로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수 학과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혹은 자기 학과의 순위가 예상보다 낮다고 판단한 일부 대학에서는 대교협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불만의 대부분은 평가기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평가기준에서 자기 대학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보다 크게 부여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항목의 평가척도에서 A등급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교수 연구실적이 좀 우수하거나, 시설·설비 보유 현황이 나은 대학의 경우 이들 평가항목의 가중치 문제를 들어, 평가점수의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사소한 사례 중의 하나로는 '교수 대 학생비'를 산출하는 평가항목의 경우에 지방 소재 대학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지방 소재 대학은 상대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비하여 재학생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학생수를 입학정원수가 아닌 재학생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으나 평가기준 - 평가항

목의 수, 가중치 부여 및 평가척도의 등급 - 은 해당 학과와 관련한 학회에서 전문 교수들을 엄선하여, 이들과 대교협 연구진의 공동 작업 - 4회 이상의 집중적인 연구회의와 워크숍 등 - 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과, 신의 손에서 빚어진 평가기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미 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학과평가의 결과 활용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실시된 학과평가를 통하여 우수 학과로 인정된 대학에 대한 보상책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즉, 우수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자율권 부여 등을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 사실 상당수의 대학들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으로 인해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우수 대학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그렇지 못한 대학과의 사이에 갈등만을 증폭시키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대교협에서는 평가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언명한 바 있다.

즉, 정부로부터의 대학 지원에 있어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보상적 지원'을,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조성적 지원'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조성적 지원의 경우에도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충, 도서관 및 전산 체계의 발전 등 주로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자체 부담금(matching fund)과 결부시킨다든지 장기 저리 또는 무이자 차용 형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sup>7)</sup>

앞으로 학과평가체제가 보다 활성화되어 위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유·무형의 사회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 것을 회귀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대학사회 일각의 "대학 평가가 대학의 재능난만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그

7) 이상주, 전제 논문, pp. 23~24.

결과에 따른 지원책도 없는 이 평가를 왜 계속하려 하는가"라는 비난 여론에 대하여는, 학과평가의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지원 유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체 학과의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실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한다.

## 7. 맺는 말

이 글을 맺기 전에 잠시 우리의 대학교육의 모습을 되돌아보자.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선진 외국 대학에 비해 작게는 1/3에서부터 크게는 1/2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세계 대학 평균의 1/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 중에서 여건이 좀 나은 편인 서울대학교의 연간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동경대학의 1/10, 대만대학의 1/3에 불과한 형편이다.<sup>8)</sup>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환경 전반의 여건, 그리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 문제와 대학의 정체성 확립 등 어느 하나 대외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지난 3년에 걸쳐 시행되어온 학과평가체제가 완벽하거나 그 효과성이 지대하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에서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학과의 발전이 대학 전체의 발전을 이루는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과평가를 필요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교수들도 상당수 있다. 사실 극소수의 대학에 한정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부풀리기', '적당히 작문하기'가 눈에 띄고 있으며, 평가를 받는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나 심지어 평가위원이나 간에 일부 교수들은 아직도

자기 소속 학과의 '점수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학마다 시설·설비의 확충과 신규교수 충원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견디느라 상당한 고통마저 겪고 있기도 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의 도서를 확충하기 위해서 고서점의 폐서(?)조차 굶어 모아 장서수를 늘린다거나,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별 효용 가치도 없는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등의 소문마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원리만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학문 탐구를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만이 유일한 활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문민정부의 수립과 함께 사회 각 부면의 자율화 정책이 발현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대학들이 자생력을 갖추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학 사회가 새로운 자기 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에 의한 지시나 통제의 추종에서 벗어나, 대학인 스스로의 힘에 의한 내부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가제도도 자율적 내부 점검을 위한 최적의 기제로서 보다 활력있게 작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평가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대학 사회의 지성과 협력에 의해 그 해결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학은 물론 정부, 기업체, 일반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대학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화를 위하여 공동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간망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강경석/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대교협 평가관리부장으로 재직중이며,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의학과 예비평가 종합보고서" 등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8) 대교협, "고등교육 관련 정부 예산 확보 대책", 내부자료, 1994, p.3.